

# 與 역대급 완승... 野 궤멸위기... 1년새 民心 얼마나 달라졌나

## 6·13 지방선거 1년

‘3선’ 박원순, 옥탑방 살이 등 행보 ‘보여주기식’ 지적 등 평가 엇갈려 교통사고 치사율 감소 등은 ‘만족’ 친형 강제입원, 배우와 스캔들 등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사고 줄이어 3대 무상복지·DMZ모노레일 추진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났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완전 승리를 거두며 지방권력까지 장악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궤멸했다.

민주당 완승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동력을 확보했고, 보수진영 지도부는 메가톤급 쓰나미를 정면으로 맞고 총사퇴했다.

메트로신문은 13일 6·13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지난 선거를 돌아보고 현 상황을 짚어봤다.

### ◆與 ‘씩쓸이’... 한국당은 TK 배수진

민주당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수도권과 부산·경남(PK)에서 대승을 거뒀다. 서울(박원순)·경기(이재명)·인천(박남춘)·부산(오거돈)·경남(김경수)·울산(송철호) 등에서 당선자를 냈다.

중원 역시 대전(허태정)·충남(양승조)·충북(이시종)·세종(이춘희)도 파란색으로 덮였다. 민주평화당과 경쟁한 호남에서도 광주(이용섭)·전남(김영록)·전북(송하진) 지자체장 자리를 가져갔다. 보수세(勢)가 강한 강원(최문순)도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구(권영진)과 경북



지난해 6월 13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 고개를 숙이고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뒀던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논스퀘어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유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 대표 등의 원이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우)만 당선자를 냈고, 바른미래당은 전멸했다. 제주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원희룡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구·시·군의회장 역시 226석 중 민주당이 151석을 석권했고, 한국당은 53석, 평화당 5석, 무소속이 17석을 가져갔다.

지선과 함께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전체 12곳 중 민주당이 11곳을 휩쓸었고, 한국당은 1곳만 가까스로 얻었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참패 후 ‘보수재건’을 외쳤던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는 투표 다음날인 1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쓸쓸히 퇴장했다. 홍 전 대표가 자리에서 내려온 후 한국당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 ◆자원봉사에 노래까지... 여야 당대표 이색공약

지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각자가 목표한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이룰 경우 이색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우세했던 민주당은 과격적인 공약을 내걸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힘을 주신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다둥이네 가족을 방문해 일일 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선 여성 의원 5명(백혜련·박경미·유은혜·진선미·이재정 의원)이 사전투표율 20%에 ‘파란머리’ 염색 공약을 하고 직접 인증하기도 했다.

한국당 홍 전 대표는 투표율 30%에 ‘아기상어춤’을 공약한데 이어,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이던 1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당선 시 서울시청 앞에서 노래 10곡을 부르고 춤도 추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여권 대선 잠룡 ‘시·도지사 3인방’은 지금

박원순 시장은 민선 7기에서도 타이틀을 유지했다. 3선에 성공한 건 박 시장이 처음이다. 박 시장 스스로도 “조선시대 한성판윤까지 통틀어 최장수 시장”이라고 자부한다.

다만 박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이어졌던 강북구 옥탑방 살이는 ‘보여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옥탑방에서 나온 후 부동산 정책 관련 강북 개발계획을 예고 없이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다. 그해 11월에는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기도 했다.

반면 보행자 중심 정책으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감소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만족도 또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최

근에는 여당과 함께 ‘제로페이’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올 4월 기준 가맹점 수는 12만 곳을 넘은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인구 1300만명의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무난하게 당선됐다. 하지만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법정까지 섰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전부 무죄 선고 이후 적극적인 도정운영에 나서고 있다.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비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시리즈’로 꼽으며 사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작한 경기도 지역 비무장지대(DMZ)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평화모노레일’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그림자 수행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박원순 시장과 ‘경남-서울 상생혁신’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연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지사를 댓글조작 관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4월 석방됐지만, 아직까지 위기는 남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 직을 잃는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방통위, 불법사이트 일방적차단 보완 마련

###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協 발족 심도있는 논의 위해 소위원회 운영

방통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해 소통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13일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인터넷 규제에 바람직한 방향과 적절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비판을 받았던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과 규제 체계,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등이다.

협의회는 14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계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학계 5인과 법조계 2인,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7인으로 꾸렸다.

방통위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은 추후 합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첫번째 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종합한 후 최종 보고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용 기자 juk@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래디슨 블루 플라자호텔에서 양국 조선, 로봇 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기업·기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노르웨이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성 장관(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 한-노르웨이, 친환경·로봇개발 등 맞손

### 산업부, 양국 산업계 4건 MOU

한국과 노르웨이가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로봇 등 미래 핵심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산업계가 4건의 협력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자율운항 선박 개발 공동연구 합의서(삼성중공업)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개발 MOU(삼성중공업) ▲선박의 친환경 도료 사용 MOU(현대중공업) ▲유럽 로봇 시험·인증 협력 MOU(한국로봇산업진흥원)다.

아울러 노르웨이·독일선급(DNV-G L)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설계 시스템 일반 승인과 현대미포조선의 친환경 LNG 병커링선 기본 승인을 받았다.

노르웨이는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선박 기자재, 한국은 선박 수출에 강한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선 분야 협력 확대는 양측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노르웨이가 발주한 선박의 50% 이상을 한국이 수주했다.

/석대성 기자

## 7개부처 합동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정부가 그동안 부처마다 따로 해오던 물놀이 안전관리를 7개 관계부처가 협력해 진행하도록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7개 부처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강이나 계곡 등 내수면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해왔고,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가, 수영장은 문화체육관광

부가 담당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가 부처별 따로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번 대책이 제기돼 왔다.

앞서 두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구성된 협의체는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이 주재하고 행안부, 해수부, 문화부, 환경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7개 관련 부처 과장급이 참여한다.

이들은 물놀이 철에 앞서 합동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홍보와 교육 등을 진

행하고, 물놀이 시즌이 끝나는 9월 이후에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할 부분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과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 1202개소에 구명조끼, 구명환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해수욕장 271개소에는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하는 등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고다발지역이나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에는 출입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취약시간 순찰도 강화해 사고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hys@